

與 ‘명태균 방지법’, 野 ‘김건희 특검법’... 같은 날 발의

與,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 있을 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 수행 규제 조사결과 왜곡행위 처벌대상 확대
野, 김건희 여사 13가지 의혹 규명 “與, 적극적으로 협조 강력 촉구”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브로커에 의한 공천 개입을 방지하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팀 한동훈’으로 나선 박정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에서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방지법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 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이라도 있는 데도 신설 법인을 설립해 여론조사 업무를 해왔다.

박정호 의원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규제 회피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 개정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실제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

여 결과조작을 사전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를 ‘명태균 방지법’을 소개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김여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직전에 야권 단일화와 정권 심판론을 이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한 판을 키운 선거였다”며 “그 업체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퍼센트 차로 이기는 결과를 냈다. 그런데, 결과는 22%포인트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우리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나오자, 수사대상에 이를 포함해 13가지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13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범죄를 차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텃밭’ 지킨 與野... 혁신당은 입지 타격

與, 인천 강화군수·부산 금정구청장 野, 전남 곡성·영광군수 당선자 배출 혁신당, 선거 전략·조직력 등서 밀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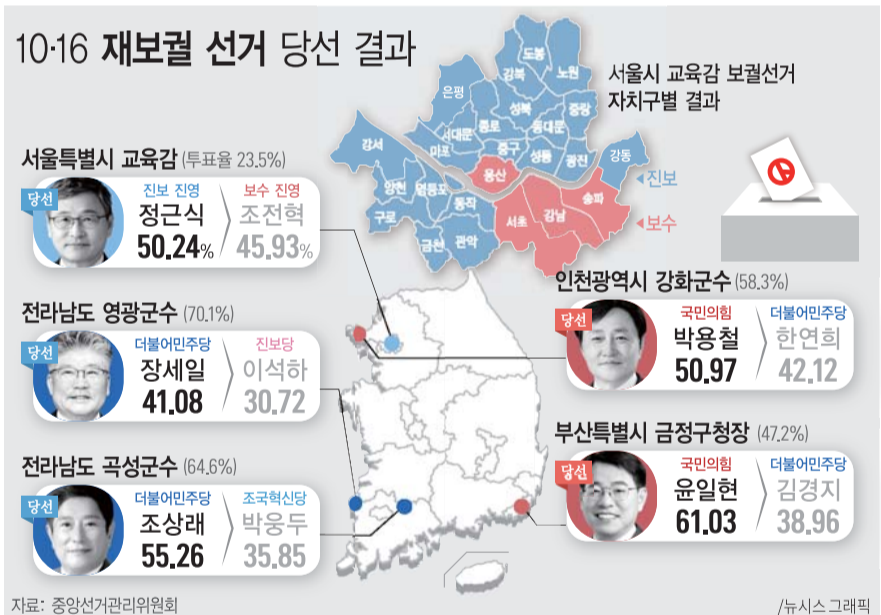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4곳 중 각각 2곳씩 승리했다. 당적이 없는 서울교육감의 경우 진보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텃밭을 지켜내며 당내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조국 대표의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6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각자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번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힌 곳은 부산 금정구다. 전임 구청장의 사망으로 재선거를 하게 된 금정구는 부산 내에서도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보수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구청장에 당선된 곳이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13대 총선부터 보수계열 정당이 독식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재·보선에서 부산 금정구가 격전지로 꼽힌 이유는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있었으며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여당 안팎으로 약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곳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이에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5차례나 부산 금정구를 찾아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제2의 정권심판’을 들고나온 야권에 맞섰다.

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식 사과에서부터 공개 활동 자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반대, 대통령실내 김건희 라인 인적쇄신까지 요구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 덕분에,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에서 지난 4월 총선 때보다 더 큰 격차로 민주당을 눌렀다.

한 대표가 ‘텃밭 수성’에 성공하며 당분간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중 대통령실에 대해 ‘쓴소리’를 한 만큼, 향후 당 운영은 물론 당정관계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질 전망이다.

야권의 격전지로 꼽히던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특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이 치열한 3파전을 펼쳤다. 전남 영광군은 민주당의 ‘텃밭’이라

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지난 8차례의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영광군민들은 무소속 후보를 3차례나 선택했다. 이 지역을 다른 당에게 내준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몇 차례나 지원 유세를 했다. 결국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1.08%로 당선됐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를 얻었다.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텃밭을 수성한 이 대표는 내달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전혀 내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으로 출발한 만큼, 이번 재·보선을 통해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호남권에서 대안 정당이 되려 했다. 그러나 ‘관성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하는 지지층과 ‘선거 전략, 조직력’ 측면에서 밀렸다는 평가다.

李 “농작물 생산조합에 수입권 주는 것도 방법”

고랭지 배추밭 방문해 직접 수확 기후위기·인력난 등 문제해결 강조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치솟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직접 고랭지 배추밭을 배추를 수확하고 현장 농민들과 소통하며 기후위기·생산비 안정·인력 수급 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인근 배추밭을 방문해 직접 배추를 수확했다. 민주당에선 배추 수확 현장에 어기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송기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가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여름배추 주산지에서 피해가 커서 배추 한 포기 소매가가 2만원에 육박하는 ‘급배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배추 수급 동향과 지난 20년간의 생활물가 조사 자료를 분석해 11월의 배추 소매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5% 비싼 가격이다.

이주한 평창 진부 농협 조합장 배추 수확 이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배춧값 폭동의 주요 원인은 ‘이상 기후’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정치권에 ▲농가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는 농가 경영비 지원 대책 ▲이상 기후에 알맞은 종자 개량 ▲농업인력공단 설립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인력 교육 및 수급 ▲휴경기 보상 및 토양 개량 사업 지원 ▲농지법 개정 및 농업인구 감소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을 위한 승계 상속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농작물이 수확 이전에 미리 계약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입도선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농가가 처한 다양한 방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강원 평창군 한 배추농가를 방문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보통 ‘농사지어서 가을이 되면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입도선매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기상이변, 특히 기후 문제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 급등해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유통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책도 강구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리고 그 안에 생산비 인하, 외국인 노동자 수급, 종자 개량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배춧값 폭등에 외국산 배추가 수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민들은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에서 농작물을 수입해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 가격이 높아도 손해를 본다”며 “농작물 수급 때문에 수입하는 업자들의 마진이 크기 때문에 해당 농작물을 생산하는 조합에 수입권(쿼터)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